

## 노예의 돈, 자유인의 돈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세 달이 지났습니다.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얘기해 오던 문명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중대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제국’은 히로시마로 끝났고 ‘일본주식회사’는 후쿠시마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히로시마 대재앙으로 귀결된 일본 제국주의는 군사력을 통해 대국을 꿈꿨고, 후쿠시마 대재앙을 통해 끝나고 있는 일본주식회사는 경제력을 통해 대국을 꿈꿔왔습니다. 이 둘은 대국을 몽상했다는 점에서 공통합니다. 하나는 군사력이고 하나는 경제력이죠. 현대국가는 언제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냐에 따라 강대국과 약소국을 나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군사력과 경제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요컨대 대국주의에 대한 몽상이 부질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사건이 60년 간극으로 일어난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입니다. 이 역사적인 의미를 간과하고 종전과 같이 나간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의 대지진과 원전사고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일본경제가 순탄하게 돌아갈 리 없습니다. 일본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의 달러경제도 붕괴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한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러경제가 붕괴직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프랑스, 영국과 함께 지금 리비아를 침공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러 때문입니다. 물론 독재국가의 민중들에게 독재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모두 개입해 왔습니까? 미국은 오히려 독재자들을 두둔하는 게 오랜 관성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욕구를 지지해서 미국이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미국은 거의 언제나 독재자의 편이었거나, 독재자가 미국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때만 그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그렇고, 카다피가 그렇습니다. 카다피는 근년에 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독자적인 통화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카다피를 제거하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미국달러의 국제적인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학살하고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때문에 침략했다는 설명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담 후세인이 석유결제수단을 달러에서 유로로 교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의 재해를 ‘원발진재(原發震災)’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지진과 쓰나미에다가 원전사고가 겹쳐져 일어난 복합적인 대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발진재’의 복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려면 일본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들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기에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가장 다급한 처지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상당히 다른 풍경이 전개될 것입니다.

### “욕심을 크게 가져라”

지금은 소위 문명세계가 역사상 유례없는 재앙을 겪으면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사회는 그런 것과 아랑곳없이 참 편한 담탄들만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가 화두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누가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짙어요.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제시되었던 무상급식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흐름입니다. 욕 얻어먹을 소린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지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작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진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민주권을 확실하게 하자거나,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권재민의 원칙에 토대를 둔 공화국을 제대로 실현하자는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기 걸려있는 박노해 시인이 찍어온 사진은 중남미 전통 부족사회에서 민중들이 실천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자기 발언을 당당히 하고 전원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민주주의를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불행하고 재미없는 것이 진짜 학교에서 도시락을 못 받아먹어서 그렇습니까?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내 발언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체가 못 되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민주적인 권리를 한번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들 대부분이 몇십년 살다 죽는 사이 몇몇 잘난 엘리트들이 간접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죠. 우리의 불행은 이것 때문이에요. 자주적인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작아요? 환장하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죠. 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이 자기 자식이 나중에 커서 자기가 일하는 그 자리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라죠. 일자리 세습제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꿈이에요. 욕심이 이렇게 작아서 그 욕심마저 절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꿈꾸지 않는데 어떻게 민주사회가 되겠습니까?

일본 근대사상사에 보면 메이지 초기부터 이른바 ‘소일본주의’ 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이 어떤 근대국가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국이 아니라 소국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역사적으로 비주류로 몰리고 패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사회 저변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이시바시 단잔(石橋澁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에 동양경제신보라는 주간신문의 주필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성향은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닌 자유주의자였어요. 전후에는 맥아더 사령부의 점령통치가 끝난 얼마 후 자민당 일당 체제로 굳어지기 전에 일본의 수상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건강 문제로 몇 달만에 사임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했다면 일본사회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생각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농촌도 황폐했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서양제국들에 의해 압력을 받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맹주가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고, 민중들은 살기 고달팠죠. 당시 이시바시 단잔은 일본사상사에서 기념할만한 몇 가지 논설을 남겼는데, 핵심 주장은 일본이 소국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시대의 일본의 근본적인 화근은 바로 일본인의 소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말한 대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이 조선과 대만과 만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침략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도 되지 않는다. 일찍이 제국주의 역사상 자진해서 식민지를 포기하고 군인들을 거두어들인 국가가 없었는데, 일본이 그것을 지금 실행한다면 서구제국주의 열강들도 놀랄 것이고, 국제무대에서의 일본의 발언권도 강해져 세계평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군사주의 노선을 확장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런 근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처지에 막강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논어>에서 공자한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사람에게 3군의 장수를 맡기겠습니까?” 공자님 대답이 “나는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겠다고 깊은 강을 배도 없이 건너겠다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3군의 지휘권을 주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걸핏하면 정신력으로 해보자는 사람,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인 사고에 젖어있는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짧은 한 순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전쟁을 가미가제로 합니까? 공자님 말씀은 그런 미친놈한테는 절대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수로 삼아서 안 된다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친놈들이 사실은 늘 지도자 행세를 해온 게 현실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온통 그런 미친놈들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요컨대 욕심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후쿠시마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발전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문제가 많습니다. 원자력발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폐기처분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전체에 430 기가 넘는 원자로가 존재하지만 고준위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핵연료나 원자로를 폐로했을 때의 고준위방사능 물질들을 보관·처분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군데 핀란드에서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죠. 지하 500 미터 깊이의 견고한 암반에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십만년 이상 한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암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그게 장기적으로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We don't know” 예요. <영원한 봉인>이라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열린 환경영화제에서 상영했다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한국이나 일본의 전문가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곳은 핀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답하는 건지 모르지요.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방사성물질 처분장으로 지금 경주에 건설 중에 있는 방폐장 공사장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보니까 그 자리가 수맥이예요. 수맥의 힘이 얼마나 센데 어떻게 콘크리트가 견뎌내겠습니까? 콘크리트는 인간이 사용한지 100 년도 안 되고, 아무리 견고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콘크리트의 수명은 절대로 천년, 만년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만, 수십만년 동안을 보관해야 하는 핵쓰레기를 콘크리트로, 그것도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요.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욕도 아니고, 한마디로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이 미친 짓을 국가적 사업으로, 세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 대강 공사와 똑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가’ 가 아니라 ‘복지사회’ 를

요즘 한국사회의 화두는 복지국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다르잖아요. 복지국가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복지사회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 자신이 자주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동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당장에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확실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일류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덴마크에서는 당연히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덴마크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국가예산이 옛날처럼 확보되지 않아서 복지시스템이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왕의 복지혜택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나라들에서 국가적 복지시스템이 실령 무너진다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덴마크가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시스템 이전에 지역적 차원에서 민중이 스스로 결성한 협동적 생활의 구조가 매우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덴마크는 개인들의 자립적 역량과 자기책임 의식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유기적인 연대와 협동적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한 개인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덴마크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스스로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부모가 싸주지 않습니다. 6 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먹을 샌드위치 도시락을 아침에 직접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강인하게 키우는 나라입니다. 혹시 늦잠 자거나 게을러서 도시락 못 싸고 학교에 가더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도와주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자기책임 의식을 갖게 합니다. 덴마크의 어떤 지방에서는 심지어 마약환자들에게도 공공기관에서 공짜로 주는 마약을 사용하든지, 치료소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짜로 마약을 제공하는 것은 가난한 마약환자들이 값비싼 마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튼 철저히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가 덴마크입니다.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낮

시간 동안 한번 낮잠을 재우잖아요. 섭씨 영하 15 도 이하가 아닐 경우에는 아이들을 옥외에서 재운다고 합니다. 물론 옷을 두툼하게 입혀서요. 지독한 사회예요. 그냥 세계 제일의 복지국가라고 할 때 우리가 갖는 피상적인 이미지와 많이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요? 튼튼한 사회란 튼튼한 개인들이 이룩하는 사회라는 철학이 여기에 엮여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강인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겁니다. 한국의 부모들이라면 자기 아이를 추운 바깥에서 재우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자식을 키우면 나약한 인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덴마크 같은 사회는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복지국가를 운위하기 전에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50 년 전에 덴마크는 굉장히 비참한 나라였어요. 독일과의 전쟁으로 국토의 절반, 그것도 전체 국토 중에서 유일하게 농사가 가능한 비옥한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남은 국토는 유틀란드 반도와 몇몇 섬밖에 없었는데, 대부분이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덴마크인들은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그보다 좀 전에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유럽의 봉건체제가 흔들리던 와중에서 덴마크의 왕이 현명한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은 농노들을 해방시켰던 일입니다. 당시 덴마크의 절대 다수 인민이 이렇게 해서 독립 소농의 지위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피를 흘리는 혁명을 거치지 않고, 계몽군주의 영단에 의해서 덴마크는 근대국가로 성장할 준비를 했던 거죠.

만일 대다수 인민이 농노신분으로 전쟁을 하고, 국토의 절반을 잃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면 덴마크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회가 되었겠죠. 그러나 각자가 작지만 자기 토지를 소유한 독립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땅을 살리고 확보하기 위해서도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농민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전쟁터에서 돌아온 제대군인 중에 달가스라는 열렬한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덴마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유틀란드 반도의 광범위한 녹화를 제창했습니다. 달가스는 수십년 동안 죽을 때까지 나무심기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후풍토에 맞는 수종을 찾아내는 데에 결국 성공을 했고, 그 결과 유틀란드 반도 전역이 푸른 숲과 목장과 기름진 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인민이 자유인으로 존재하면,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예를 덴마크는 보여준 셈이죠. 인민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더욱이 그 무렵 덴마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상가이자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출현합니다. 그룬트비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룬트비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육을 받고, 영국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으로,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종래 덴마크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설교를 라틴어로 하던 관습을 깨고 덴마크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토박이 덴마크말로 하기 시작했고, 교육도 철저히 평민교육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의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예배를 보러오는 가난한 민중들 속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성 제도권 교단과 끊임없이 대결하면서 그가 옹호하고자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덴마크의 다수 민중의 이익이었던 거죠. 그는 직접 시를 쓰고, 찬송가를 짓고, 스칸디나비아의 옛 전설, 민담, 신화를 수집하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룬트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바로 ‘국민고등학교’ 라는 주로 농민을 위한 성인교육기관을 세운 일입니다. 이 학교는 시험도, 자격증도 없고, 다만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개월이든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농사에 관한 실습 이외에 철학과 문학과 역사를 배우는 선구적인 자유학교였습니다. 이 ‘국민고등학교’ 운동은 국왕으로부터도 아낌없는 도움을 받아서 덴마크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여러 면에서 오늘의 덴마크 복지사회의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고등학교’ 를 통해서 덴마크 사람들은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창조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덴마크가 지금 풍력발전으로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풍력발전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곳도 바로 ‘국민고등학교’ 였습니다. 그들은 오래 전에 벌써

에너지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국민고등학교’에 모여서 생활과 학습을 같이 하던 덴마크 사람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풍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 힘으로 자립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귀리와 보리, 잡곡을 심고, 돼지를 키우며 자급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다보니 잉여가 생겨나고, 그것을 다른 유럽국가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신대륙에서 값싼 곡물이 유럽으로 쏟아지니까 경쟁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고등학교’에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답이 협동조합입니다. 소규모 경영으로는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재빨리 이해한 농민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생산, 공동구매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돼지사육 농민들부터 시작해서 전국 곳곳에 축산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고, 점차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덴마크라고 하면 협동조합의 나라라고 익히 듣고 자랐어요. 협동조합이란 소규모 독립 생산자들의 자주적 연합조직입니다. 그 조직에는 상전과 하인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참가자 누구나 대등한 자격으로 민주적 권리와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연합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 사회주의는 ‘레디컬 데모크라시’ 이다

저는 맑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의 좋은 전통을 훼손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생산수단의 국유화 내지는 공유화를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을 폐기하는 게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사유재산제까지 폐기했던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망했잖아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국가에 의한 인민의 노예화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소련이 망한 것은 혁명 초기에 활기를 띠었던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패퇴한 데에서도 큰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단농장 시스템을 강제로 밀어붙인 데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농민들의 정서와 심리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농노로 살아온 농민들이 혁명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고,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기대를 갖는 순간에 그 땅을 뺏고, 집단화를 강요한 것은 자멸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은 만년 이상 뿌리 내려온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농민에게는 자기 땅이 아니면 농사짓는 게 신명이 날 터이 없습니다. 거의 강제노동일 뿐이죠. 그러면 결국 국가적 생산성은 형편없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소유에 대해 갖는 애착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회운동은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의 규모는 제한해야 하고, 소유에 있어서 개인적 격차는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지만, 반드시 사회적 안정성을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의 수입이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백배 천배 이상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회정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치라면 이것만큼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 제도 그 자체의 존립은 전혀 다른 얘깁니다. 사유재산제를 철폐하면 자유로운 삶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사유재산제도와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야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과 자본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장과 자본주의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면 보통 시장을 폐기한 계획경제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계획경제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련에서는 관리들의 철제책상의 판 두께가 몇십센티미터나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계획에 따라 철강생산을 한 결과 그 철강을 사용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무겁고 두꺼운 철제책상을 만들어내는 희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자의 공급과 수요는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차질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제책상의 판 두께가 몇십센티나 되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몰상식한 짓이 계속되면 결국 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회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도 시장이 중요하지만, 자유로운 시장 기능이 살아있어야 개인이 인격적인 자립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견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사회주의인가? 저는 ‘래디컬 데모크라시’가 바로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철저화가 사회주의입니다. 서양의 부르주아계급이 봉건체제에 대항하여 시민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명분은 만인의 자유와 평등과 우애, 즉 한마디로 민주주의였습니다. 실제로 밑바닥 민중으로부터의 급진적 압력이 없었다면 시민혁명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시민혁명에 성공한 다음에는 부르주아계급은 혁명의 성과를 독점해버리죠. 소위 정치적, 시민적, 법적 권리는 명목상으로나마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는 자기들이 독점하고 민중들을 배제하잖아요. 경제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평등이 실현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명목상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인민의 자기통치를 뜻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내가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주요 논의과정에 참여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 정치적인 권리를 위임해서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대 도시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수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모든 개인이 실질적인 민주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협동조합이에요.

주식회사에서 결정적인 발언권은 대주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1인 1표예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스스로가 경영자이자 동시에 종업원이에요. 모든 조합원은 발언권이 동등해요. 모든 결정이 민주적인 토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만인이 민주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적 틀밖에 없어요. 독립적 개인 혹은 소규모 단체가 모여서 협동적 결사체를 만들고, 또 그 대표들이 모여서 더 큰 결사체를 형성할 수 있겠죠. 간디는 일찍이 독립된 인도국가는 70 만개의 자율적인 기층 마을이 모여서 횡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 토대 위에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은 중앙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기층 마을에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란 기층 마을들이 파견한 대표자들의 협의체 같은 것이 돼야 한다는 게 간디의 생각이었습니다. 간디는 그게 제국주의 시대를 제대로 극복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가 보장되는 정치체제라고 보았던 것이죠. 저는 간디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한 농경사회가 아니므로 간디가 말했던 마을중심 민주주의를 문자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식 해석입니다. 현대식으로 고쳐 말하면, 간디의 마을들은 시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형성된 협동적 결사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주적 협동체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정당정치, 즉 부르주아 의회민주주의는 형식상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불과할 뿐, 다수 민중의 진정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토대 위에서 훌륭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온 덴마크와 같은 나라의 역사를 주의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혹은 프랑스 사람들은 전쟁과 혁명, 그리고 공업화를 통해서 근대적 정당정치를 발전시켜 왔지만, 그 정당정치는 다수 민중을 배제하는 사실상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사람들은 일찍부터 풀뿌리 차원에서 협동적 결사체들을 광범하게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동적 결사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이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사상가였던 프루동이었습니다. 프루동의 유명한 말에 “All associated and all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발적으로 협동적 결사체에 참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 최고의 복지는 풍부한 인간관계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향유해야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일찍부터 ‘국민고등학교’와 같은 자주적 교육에 힘입어 이 원리를 체득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대체로 국가나 국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나라 국(國)자가 이렇게 역겨운 것은 결국 우리가

겪어온 역사와 오늘날의 정치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덴마크 사람들은 국가나 국민이라는 말에 대해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나 가족의 생일날에 자기 집에 국기를 게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들리죠? 그러나 덴마크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국왕이 경호원도 없이 코펜하겐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국왕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경호원이 왜 필요해요? 시민들 전체가 경호원이잖아요. 2 차 대전 때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닐스 보어라는 양자물리학자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독일 점령군 사령부가 덴마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덴마크 정부에 몇날 몇시부터 유대인들이 전부 노란색 완장을 차도록 조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시각이 되자 덴마크 국왕부터 완장을 찼어요. 그것을 보고 모든 국민이 완장을 차버렸어요. 독일군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사이에 덴마크 정부는 유대인들이 스웨덴으로 피신하도록 도와주었고, 그 덕분에 닐스 보어도 살아났습니다. 그런 국왕이니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국민고등학교’ 라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저도 이 학교 이름을 ‘민중고등학교’ 나 ‘인민고등학교’ 로 부르는 게 올바른 번역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국민고등학교’ 가 틀린 번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덴마크에서는 국민과 인민이 별 차이가 없는 게 확실하니까요. 우리나라에도 ‘국민고등학교’ 는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어요. 1920 년대에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평화주의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라는 분이 그룬트비의 사상에 공명하여 일본에서 ‘국민고등학교’ 를 처음 세웠는데, 몇몇 조선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바로 우치무라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었거든요.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이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김교신 선생의 제자에 이찬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홍성의 풀무학교를 세운 분이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보면 홍성 풀무학교는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 를 모방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는 자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협동적인 연대조직에 참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립된 채 1:1 로 국가와 상대하고 있죠. 가정도 붕괴하고 있어요. 이웃간의 친밀한 관계가 다 깨진 상태에서 고립된 개인들이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국가를 향해 반값 등록금제를 실시하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복지국가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경제성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하고, 그러자면 최대한 고용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게 모두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안 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갈수록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도, 일자리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경제는 기본적으로 값싼 석유에 의존해 온 경제입니다. 석유는 비단 에너지뿐만 아니라 현대적 문명생활을 위한 온갖 기초적 재료로 사용돼 온 마법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법의 물질이 값싸게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도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값싼 석유시대의 마지막 국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10 년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말입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들 걱정합니다.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더 앞장서서 걱정을 하죠.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은 사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계속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망합니다. 생태적인 조건으로 봐서도 인구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노동인구와 소비인구가 줄어들고, 연금을 불입할 인구가 줄어들면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것도,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세상이 지금 세상의 단순한 반복·확대일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낡은 습관적인 논리나 관점으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전혀 낯선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은 오히려 옛 사람들의 근원적인 지혜로 돌아감으로써 열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조짐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로 삼아온

미국이나 유럽의 대국들이 아니라, 덴마크와 같은 소국들의 역사와 문화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대국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소국주의의 논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원리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하지만, 결국 덴마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제도 개혁 이전에 시민들 자신의 자주적 협동적 결사 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자주적 결사체가 활발해져야 국가도 건강해지고, 인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근대국가는 자기 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고립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이 단결하는 것은 싫은 일이죠. 반대로 우리가 국가나 자본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단, 개인들이 자신의 독자적 인격과 자립성을 유지하면서 연대하는 것이죠. 우선 나 자신이 강한 인간, 실력 있는 인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이야말로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라는 진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풍요로운 인간관계입니다. 물론 그 인간관계는 민주적인 관계여야 하죠. 자기 혼자 잘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유인들끼리 형성되는 결사체 속에서의 자립적인 인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대목에서 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군요. 돈은 그 자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들의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은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생명활동이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불가결한 게 돈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를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돈에서 벗어나는 게 좋은 삶일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범정스님이 무소유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할 만한 발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돈 없이도 유일하게 가능했던 문명사회가 역사적으로 딱 하나 있습니다. 잉카제국이에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보면 잉카제국에서 사람들이 물자를 어떻게 구했는가 하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신대륙을 탐험하거나 방문했던 초기 여행자들의 견문록을 바탕으로 씌어진 작품입니다. 잉카제국에서는 모든 생산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 옥수수나 감자나 호미나 짚신을 마을의 공동저장고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짚신이 필요한 사람은 짚신을 갖다 쓰고, 감자 먹고 싶은 사람은 감자를 가져갑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쓰는 문자 그대로의 공산사회죠. 물론 이렇게 되면 좋죠. 복잡한 문명생활은 안 되겠지만, 웬만큼의 문명적 생활이 가능합니다. 도시도 건설할 수 있죠. 다들 이런 식으로 사는 데 동의하면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잉카제국은 예외적입니다. 다른 모든 문명사회는 공동물품창고 대신에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폐를 사용한 교환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제도와 화폐제도가 오랜 세월을 걸쳐 계속되는 동안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돈이 단순한 교환수단을 넘어서 축적수단이 되고, 부를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게 가능해지고, 강자에 의한 약자의 노예화라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오늘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혁명운동이 그렇고, 협동조합 운동도 모두 이 상황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이죠. 그런데 화폐문제를 직시함으로써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논리를 극복하려는 시도들도 여기저기서 행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는 발도르프학교라는 특이한 자유학교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발도르프학교를 창안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20 세기 초의 현인 중의 현인이었죠. 18 세기에 피테가 있었다면

20 세기는 슈타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멀리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0 세기 초에 이미 근대적 농법 때문에 세계 전역의 토지가 피폐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땅을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농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분이예요. 농업문제뿐 아니라 종교, 교육, 의료, 경제, 금융, 과학기술 등등 온갖 방면에 걸쳐 풍부한 대안적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인지학(人知學)이라는 이름으로 종합했지요.

그 슈타이너의 이론 중에 사회삼층론(社會三層論)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유, 평등, 우애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프랑크혁명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슈타이너는 이 세 가지 사회적 이상이 실현되는 영역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즉, 자유란 인간의 정신적, 문화적, 예술적 삶에 관계된 이상입니다. 평등은 국가와 법에 관련되어 만인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애는 경제생활의 원칙을 뜻합니다. 인간다운 경제란 무엇보다도 우애의 원리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슈타이너의 철학에 따라서 지금 독일의 일부 인지학회 회원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고, 공동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신들의 소득을 모두 예치해 놓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그 계좌에서 그때그때 인출하여 쓰는 방법입니다. 마치 잉카제국의 공동물품저장고 같은 방식이죠. 누가 번 돈인지 따지지 않고, 소득 일체를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자신이 애써 번 돈을 다른 사람이 고급 자동차를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공동체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인간다운 경제란 우애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슈타이너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상을 강조하면서 자기희생을 강조하는 운동은 보편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변혁을 위한 노력이 개인들에게 희생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그 사회운동은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 각자의 인간적인 성숙을 위한 수련은 부단히 해야 하지만, 개인의 이기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지속성도 없고, 인간본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기는 뜻맞는 이들과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재산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복지 시스템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소규모 공동체를 좀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차원으로 확대하자면, 역시 어느 정도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 제도화된 금융 시스템이 바로 지금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 수십년 전부터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은행’ 이란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경제든 지역경제든 경제에 있어서 금융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2009 년에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파산 이후에 현대적 금융제도라는 게 결국 엄청난 속임수라는 게 밝혀졌죠. 투기로 망한 금융회사와 그 CEO 들을 배 불리는 데 미국 국민의 세금이 1 조 달러나 들어갔습니다. 금융파생상품이니 뭐니 하면서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해간 사기꾼들을 살리는 데 말이죠.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당장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자면 그 사기꾼들을 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가 지배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금융제도의 허구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은행’ 이 유럽에서 새삼스럽게 더 주목을 받고, 고객도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은행’ 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도 금융 시스템이 좀더 윤리적이고,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금융 협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가 매우 낮은 은행이예요. 그런 은행으로 전형적인 게 독일의 GLS 은행(대부와 증여를 위한 공동체은행)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사회적 은행’ 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GLS 은행은 주로 슈타이너의 아이디어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이자가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돈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은행에는 은행 운영진과 주요 고객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대출금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증여를 해줍니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 저금한다고 할 때, 우리는 대체로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은행이나 저축형태를 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금한 돈이 어떤 식으로 이용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서민들의 저금은 약소하겠지만, 그게 한푼 두푼 모이면 막대한 금액이 될 수 있고, 그 돈이 악덕 기업이나 부패한 정치가들에게로 건너가서 아동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데 사용되고, 강과 숲을 파괴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데 쓰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단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사업일수록 대개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결과적으로는 비윤리적인 범죄의 공범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몇 푼의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내 돈이 좀더 가치있게 쓰이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은행’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나 이 은행도 수익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계속하자면 최소한의 이익이 있어야죠. 그래서 3P 원칙이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Profit, People, Planet, 즉 이익을 내되 사람을 위하고, 지구를 위한다는 원칙입니다. 놀랍게도 이 은행은 70 년대에 시작되어, 지금 독일의 웬만한 도시에 지점들이 있고, 현재의 은행 총자산 규모는 독일 최대 은행이라는 도이체뱅크의 약 1/1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순수히 서민들의 금융 협동체로는 굉장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독일 시민들의 수준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이성적인 반응을 보여준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원자력발전을 조만간 모두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내렸잖아요. 메르켈 수상이 선거가 무서워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없습니다. 시민적 성숙성이라는 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독일에서 녹색당이 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겠어요? 열렬히 호응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룹이 있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녹색당 창당이 가능하다면, 보다 기초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 하나라도 ‘사회적 은행’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협동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될 때 녹색당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 노예의 돈에서 자유인의 돈으로

‘사회적 은행’의 경우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가화폐를 가지고, 그것을 선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 운동은 기왕의 국가화폐가 아니라, 아예 화폐 자체를 지역공동체 자신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말하자면 돈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자는 거죠. 화폐발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화폐를 발행한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서 저절로 갖는 특권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이것을 ‘시노리지’라고 부릅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 ‘시노리지’를 지역이나 공동체 자신이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보통 돈이라고 할 때는 대개 한국은행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노리지’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돈 중에서 한국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아요. 지금부터 20~30 년 전에는 전체통화량 가운데 30~40% 쯤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3~5% 정도일 거예요. 실제로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 드물잖아요. 대개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 쓰고, 송금할 때에도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거의 전부가 전자부호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전자부호로 표시된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입니다. 신용카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카드를 내면 상점 쪽에서 전자기기를 통해 금융망에서 그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결제가 됩니다. 결제가 되는 순간 그 이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라는 것은 은행이 고객에게 대부를 해주는 순간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돈에서 꺼내어 은행이 내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결제하는 순간, 새로운 화폐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카드의 경우는 상점 쪽에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때는 대출받은 고객이 이자를 물게 돼 있죠. 여하튼 은행은 수수료든 이자든 대출을 해준 대가를 챙깁니다. 그것이 ‘시노리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중은행이라고 부르는 민간은행들이 매일매일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준 대가로 챙기는 이자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게다가 근대적 은행제도에서는 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는 돈을 대출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것이 부분준비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가령 100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비율은 스위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의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정한 규칙에 따라 다양합니다. 심지어 은행이 한 푼도 없어도 얼마든지 돈을 대출할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돈은 사람들이 은행에 빚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은행에서 대부 받은 돈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이자’ 해서 돌려줘야 하죠. 은행은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먹습니다.

한국은행이 지폐와 동전을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물론 ‘시노리지’이지만, 그것은 지금 전체통화량 가운데서 미미한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쨌든 국가의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간 상업은행은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영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노리지’를 통한 막대한 이익을 민간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화라는 것은 원래 국가면 국가, 지역이면 지역의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구나 수도나 철도처럼 국가가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해야 할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그런 공공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고, 민간금융업자와 자본가들의 사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서민들은 돈이 없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채 때문에 망하고 자살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연방정부든 지방정부든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주(州)가 하나 있는데, 노스다코다 주입니다. 노스다코다 주는 재작년 이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튼튼한 재정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미국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하면 노스다코다가 주립은행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9 세기 말에 가난한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신용조합이 발전하여 주립은행이 되었는데, 노스다코다 주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무출납, 공무원과 교사들의 급여 등이 모두 이 주립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는 민간 상업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노리지’를 노스다코다 주에서는 노스다코다은행이라는 공공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거두는 이익이 그대로 주의 공공자금으로 쓰일 수 있죠. 그 돈으로 공익사업을 일으키고, 학교도 짓고, 실업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스다코다의 경우는 은행이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하면 그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주립은행 신설운동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스다코다의 예가 자극제가 된 거죠.

지금 제가 오늘날의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허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성의 경제학자들은 절대로 문제제기를 못 합니다.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문학자는 왜 셰익스피어가 중요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못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항상 문외한이 하게 돼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이 무슨 빛깔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미

오랫동안 시스템 속에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기존의 금융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은행의 공립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은 가장 레디컬한 자주적 금융 시스템이면서 우리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입니다. 지난 2 월에 제가 잠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화폐에 관한 최근의 자료들을 보다가 일본 나고야 근교에서 한 젊은이가 세계 최초의 쌀본위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30 대 청년이더군요. 나고야대학을 다니다가 재미가 없어서 도중에 그만두고 몇 년 동안 배낭 하나 메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지역화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젊은이는 지금은 일주일에 사나흘은 시내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일본사회의 희망은 유기농 농사에 있다고 믿고, 어떻게 하면 유기농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지역화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근교의 몇몇 농민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 5 월에 쌀농사가 시작될 때 지역화폐 1 만장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오무스비’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연대’ 라는 뜻도 있고, ‘주먹밥’ 아라는 뜻도 있어요. 아무튼 지폐 한 장이 유기농 현미 반 홉에 해당되게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가을에 그 지폐를 쌀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농사를 시작할 때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주고, 농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농사철 동안 논밭 일을 도와주러 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답례로 주기도 하고, 미리 약정을 한 인근의 협력 상점들에서 이 지역화폐를 사용했습니다. 협력점은 카페나 식당, 마사지, 이발소 등등 소규모 상점들 중심으로 30 개쯤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취지에 찬동해서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협력점 사람들은 장사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지만 아이디어가 재미있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협력점으로 음식도 팔고, 차도 파는 가게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이 지폐를 들고 오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고, 내년에도 계속 협력업체로서 참가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무스비’ 라는 지역화폐에는 쌀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미국 달러이건 한국은행권이건 금은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화폐일 뿐이죠. 그러나 지금 나고야에서 한 일본청년의 아이디어로 진행되고 있는 ‘오무스비’ 라는 지역화폐는 엄연히 쌀이라는 인간생활에 매우 긴요한 물건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신용이 없죠. 저는 기존의 지역화폐 운동 중에서 이 쌀본위제 지역화폐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폐는 협소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죽어가는 농사와 농민과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기존의 민간은행이 빌려주는 화폐가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있는 시민단체가 농민들과 제휴를 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면 됩니다. 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용에 의존하는 지역화폐 운동보다는 훨씬 더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나고야의 이 쌀본위제 지역화폐는 작년 10 월에 농사가 종료되었을 때 총 1 만 장 중에 7 천 장이 회수되어, 현미 쌀과 교환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이게 좀더 확산만 되면 사람들이 국가나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이웃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 일본 청년과 헤어질 때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쌀본위제 지역화폐라는 아이디어를 널리 알리고 실행해보겠다고, 그래서 동아시아 쌀본위제 통화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 은행’ 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벗어난 통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주체적인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이대로 기존의 통화제도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금융통화제도는 경제성장을 강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근대적 통화제도에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즉 부채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고객에게 이자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원금만 대부해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원금만 대부 받습니다. 은행에 상환할 때 필요한 이자는 은행에서 발행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갚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는 어디서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추상적인 탐욕 때문에 경제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을 멈추려면 금융 통화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 제도를 그냥 두고 아무리 성장 없는 경제의 필요성을 논해봤자 헛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금융통화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이 제도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 있고, 그들이 국가권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지배체제가 붕괴하면 붕괴했지, 달러체제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통화제도의 발본적 개혁을 지지하거나 묵인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풀뿌리 차원에서 이러한 지배적인 금융통화제도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역화폐 운동입니다. 자연환경을 살리는 것도, 농촌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도 결국은 지역화폐와 같은 자주적 협동운동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구의 장래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끼리 협동하고 연대를 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인데, 기존의 금융지배자들이 던져주는 푼돈에 매여서 하루하루 노예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와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본가와 은행업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시노리지' 를 우리 자신이 차지하자, 그게 우리가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중질문] 오늘 쉽게 들을 수 없는 강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생각들이 다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쟁 사회에서 복지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참 힘들고 요원할 것 같아요.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 보다는 복지국가 만드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바꾸는 게 쉬우냐, 사회를 튼튼히 하는 게 급선무냐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얼마 전에 모 신문사 기자들이 복지국가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덮어놓고 모방하겠다는 생각 이전에 우선 미국이나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붕괴된 원인을 조사해보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지금 당장에 세금만 많이 내면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지 모른다.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을 많이 내라면 강탈당한다고 느낄 게 틀림없다. 앞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오히려 1947년부터 1977년까지 융성기였던 영국이나 미국의 복지국가 시스템이 그 이후에 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따져보는 게 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열매나 꽃부터 차지하고 싶어하지만,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뿌리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혹시 최근에 방송되었던 텔레비전 드라마 <짜짜> 보셨어요? 조선 말기를 무대로 했는데,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려는 의적(義賊)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하급 무관을 지내고 있는 아들 사이에 주고받는 인상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순진한 데가 있지만, 아버지는 양심이 아주 죽지는 않았지만 세상물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의로운 세상이 오리라고 보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리석은 놈아, 생각을 해봐라. 세상에는 청렴한 선비도 있지만, 탐관오리가 더 많다. 청렴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행동을 하지만, 탐관오리는 양심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걸릴 게 없다. 양심이 없는 인간과 양심이 있는 인간이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언젠가 백성들이 눈을 뜨는 날이 오면 달라지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왈 “백성들이 눈을 뜬다고? 어느 천년에?” 기막힌 이야기죠. 이게 역사적 진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년, 만년이 걸리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정권을 바꿔야죠. 그리고 양심적인 인물들이 가급적 많이 여의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서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나 자신과 내 이웃들의 손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일본에 다카기 진자부로라는 유명한 시민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전도유망한 핵화학 전공자로서 도쿄도립대학의 교수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도중에 핵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원자력발전 철폐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퇴하고 독립적인 시민과학자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험난한 길을 선택했던 것은 “다음 세대에 희망을 이어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책을 세 권이나 썼습니다. 자기 일생에 원자력발전이 폐기되는 것을 못 보고 죽어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에는 핵과 원자력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책을 쓴 거죠.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리 하나라도 더 놓는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_이지훈(나눔문화연구원)